

사례로 본 학생인권 스케치 - 사생활의 자유, 참여권

○ 학습목표

- 사례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다.
- 사례를 통해 정신적 자유권을 이해하고 보장할 수 있다.
- 사례를 통해 학생의 참여권을 이해하고 보장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보호
- 학생의 정신적 자유권의 의미와 보장
- 학생의 자치 및 참여에 관한 의미와 보호

1.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정보권)의 의미와 내용

가. 조항의 의미와 관련 규범

-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개개인이 독립적 주체이므로 본질적으로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삶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대량화, 집단화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될 우려도 현저하게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기정보관리권이 중요한 인권영역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 이에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배제와 명예에 대한 공격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교육기본법>(제23조의3)¹⁾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은 학생이 개인정보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정보의 자기관리권을 보장할 것을 학교장과 교육감 등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 학교 내 학생의 개성실현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자기정보 보호 및 관리권을 학교의 특수성에 맞추어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학교 내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한계(프라이버시권 제한의 방법과 절차)

-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나,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학교 교칙에 의하여 교육 목적 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이라도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즉, 복장 등 용모의 경우는 학교 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제12조 제2항 후문), 학생이나 교원의 안전 등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교칙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제13조 제2항 본문), 휴대전화의 소지나 이용 역시 학교 교육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교칙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2조 제4항)

- 결국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은 최대한 존중하되,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또는 학생이나 교원의 안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학교 교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방법(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사례를 통한 프라이버시권의 이해

1) 사례1 : 두발검사

- 오늘 갑자기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제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벌점을 주셨어요. 내일까지 머리를 깎지 않으면 다시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머리 모양도 단정하고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말이죠. 학교가 무슨 군대도 아닌데, 제 머리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5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학교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두발 단속문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진정사건에서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면서, 최대한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생의 두발 뿐만 아니라 용모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만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학생의 두발 길이가 너무 길거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교육이 필요하다면 강제적 처분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사례2 : 교문에서의 일괄적 복장 검사

- 교과 과목 수업 중에 생활인권부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모든 학생들의 교복 모양을 검사하였어요.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복을 변형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업이 중단된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학생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욱 이상했어요.

▷ 일부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문이나 현관, 심지어 교실에서 일괄적인 학생지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복 미착용 등교, 교복 모양 변형, 실내화 미착용, 지각이나 무단이탈 등 학교 교칙을 위반하는 복장 착용의 사례를 집중 단속하여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업 분위기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의 교칙위반 행위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학생들마저 잠재적 교칙 위반자로 취급하는 일괄단속이나 집중지도는 편의주의적 행위이자 권위주의적 행태이며, 인권적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 내 학생지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형사법에서는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개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도 연습되고 몸에 익혀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기에, 집단적이거나 일괄적 단속 형태의 학생생활교육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즉, 학생 생활교육은 집단적 지도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례3 : 소지품 검사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학년부장 선생님과 마주 쳤는데, 느닷없이 제 주머니를 뒤지시며 담배와 라이터를 압수해 버리셨어요. 물론 담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아이들이 다 지켜보는데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바지주머니를 막 뒤지시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2항은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해석 상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이유가 있거나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지품 검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학교 내에서 흡연과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라면 교육 목적상 해당 학생을 합리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중·고등학교에서의 금연지도는 흡연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건강권과 수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화재 원인으로 학교 시설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에서 엄중한 생활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교칙에 정한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도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강제적인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흡연 학생들이 은밀하게 흡연을 하거나 흡연 상황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흡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이 흡연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해당 학생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부당한 신체수색(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학생이 학교 내 소지가 금지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상담실이나 학생지도실 등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학생의 동의를 받아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칙 위반이 명백함에도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교는 미리 학교 교칙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를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흡연 학생과 동일한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교육적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학칙에 따라 보다 엄중한 교육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교육적 지도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지속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경우 무리하게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교칙에 따라 지도거부나 위험물건의 검사 불응, 흡연 간주 등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사례4 : 휴대전화의 압수

- 우리 학교는 수업 전 휴대전화를 수거함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수업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선생님께 적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시더니, 한 달 동안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와 중요한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했으니 너무 걱정입니다.

▷ **학교 내 휴대전화의 사용과 제한은 반드시 학교 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제16조는 아동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교 교칙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3조 제4항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에 따라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수업방해는 물론 학생의 정신 건강문제까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의 사용과 제한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된 학교 교칙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칙에 따르지 않고 선생님의 판단만으로 휴대전화를 한 달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휴대전화 제한의 문제를 넘어서 학생 개인물품의 부당 압수 문제로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 지양해야 할 조치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수업태도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휴대전화의 사용 예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업 방해 등의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나 과도한 사용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교칙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압수하는 등의 조치는 임시적, 단기간의 조치로만 행사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함은 반드시 교칙으로 정하여 사전에 학생에게 공지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 1) 학습 목적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과도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0.10.29. 결정)
- 2) A중학교 및 B, C 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6.5.16. 결정)

어야 할 것입니다.

5) 사례5 : 교복 고정형 명찰

- 우리 학교는 교복에 명찰이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마다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보는 것이 싫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 사람의 이름, 즉 성명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며, 어느 범위까지 혹은 누구에게까지 알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복 위의 고정식 명찰은 원하지 않는 성명권의 노출을 야기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름의 노출로 인해 범죄 피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이후 계속해서 고정식 명찰의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권조례 제14조의 제2항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정명찰보다는 탈부착이 가능토록 하거나 명찰 위치 주머니 위에 덮개 천을 만들어 학교 밖에선 덮개 천을 꺼내 이름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학생의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고정식 명찰 부착 강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09.11. 결정)

○○지역 일부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 참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실내 CCTV 설치 관련 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2. 2. 결정)

교실 내 CCTV 설치 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저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되므로 교실내 CCTV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

2. 학생의 정신적 자유(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

가. 학생의 정신적 자유의 의미와 관련 규범

- 개인의 정신적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적 전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정신의 자유를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 학생의 정신적 자유를 학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서약서 등 제출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 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체벌금지의 학교방침이 있었음에도 임의적 기합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9. 10. 12. 결정)

2)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5. 12. 26. 결정)

나. 사례를 통한 학생의 정신적 자유에 대한 이해

1) 사례1 : 종교의 자유

- 저는 종교가 따로 없지만 고등학교를 종립학교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매번 애국조회 시작과 종료시간 직전에 교장선생님이 기도를 하시고, 모든 학생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세요. 때로는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 등등의 말로 겁을 주기도 합니다. 종립학교에 진학한 것이 제 뜻도 아닌데 저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 종립학교는 각 종교의 성격과 특징, 추구하는 목적을 반영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도 종교교육의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립학교 역시 공교육 내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학교에 강제배정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종교 과목의 수강이나 부수적 종교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종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의 교육이나 종교 활동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특정 종교 활동을 거부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조치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4.22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인권조례는 제16조 제3항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애국조회 등 비종교적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기도를 종용하는 등의 종교적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모든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3차 권고(2011년)】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2) 사례2 :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합법적인 청소년인권단체 회원이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인권부에서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저를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합법적 집회에 참여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어른들의 눈에는 학생들이 미성숙하여 항상 보호받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표명된 의견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정한 것처럼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비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존중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표현의 기회 보장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외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넓게 보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기본법」이 학교교육의 기본 취지를 민주시민교육으로 지향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서 민주주의 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 현재는 학교 내 아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령도 없다며, 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²⁾

그럼에도 우리는 학교 내외에서 규범상으로나 사실상으로 학생들의 의견표현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학교 측이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합법적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다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이며, 학교 교칙에 합법적 집회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CRC/C/15/Add.197)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한민국 인권상황보고서(‘학생들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 항목,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9면, 2012년 10월 외교통상부)>

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 규정이 있다면 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 위반(2005. 9. 28. 결정)
- 2)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8. 2. 28. 결정)

3. 학생 자치와 참여권의 의미와 내용

가. 학생 자치와 참여권의 의미와 내용

-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이자 현재의 시민이기도 한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게 함은 물론, 학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케 하여, 교육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자주적 인간상 구현 및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의 자기관련성 인정 사안에 대한 견해 표시권 보장 및 정당한 비중 부여 의무’와 ‘자기관련성 인정 사안에 대한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한 해당 기관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활동의 적극적 보장 의무 부여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의 규정을 두어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나. 사례를 통한 학생 자치와 참여권의 이해

1) 사례1 : 학생자치권의 보장

- 학생회를 통해 급식환경이나 벌점제도 개선 등 학교에 이런 저런 의견을 제출하고 싶지만, 2학기 내내 전체 학생회의는 물론 학급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께 여쭙보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매진하라며 학급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어디에 대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학생회의 개최와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학급회의 등 학생자치를 보장하는 시간이 일방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학생회를 통해 자

신들의 복지 개선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학생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전체 학생을 대표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이나 다른 교육활동에 밀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자치권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8조는 학생자치권의 보장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부합하는 학생자치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회 자치공간의 확보, 학생회 소집 및 운영의 자율권 보장, 학생자치 지도교육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지원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사례2 : 학생참여권의 보장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운동장 개선 사업 등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학생의 의견을 묻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생도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방법은 없나요?

▷ 학생은 학교의 중심이며, 교육영역이든 행정영역이든 학교 내 대부분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학교의 일 주체로서 인정하고,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토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20조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학생대표와 학교 관리자 간의 정기적 면담 실시하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주인정신과 애교심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실천할 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 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권고